

복지 축소·지방자치 훼손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촉구 결의안



2015. 1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 축소·지방자치 훼손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63
----------	-----

발의일자 : 2015. 11. 3.

발 의 자 : 구본승 의원

찬 성 자 : 이용균의원, 강선경의원

1. 주문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 사업간 균형적 발전과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리지침”은 복지 축소를 야기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철회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리지침”은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의 정비를 제기하고 있어 기존 수혜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 후퇴를 가져올 것이 명확하여 심히 우려되며
- 사회보장사업은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최우선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 사회적 논의 과정이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유사·중복성의 정의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증진 사무를 축소하는 것으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함.

3. 결의안 : 불 입

복지 축소·지방자치 훼손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촉구 결의안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사업 간 균형적 발전과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정비지침을 통보하였고, 정비결과를 11.27까지 1차, 2016.1.15까지 2차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복지재정 효율화 중앙대책단을 통해 결과 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사회보장사업 정비 실적을 반영기로 하였다.

정비 추진방안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중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업군별 정비유형을 살펴보면 ①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②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는 폐지 권고하고 ③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사업(맞춤형 급여제도) ④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내용 변경, 타사업과 통합하고 ⑤ 자체 발굴사업은 폐지, 변경 등으로 정비기로 하였다.

당장 201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유의 출산 장려정책, 공공 보건사업, 장애인 및 노약자 지원정책 등을 추진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우리구의 경우 정비대상사업이 4건으로 정비가 진행된다면 2016년도 강북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컴퓨터교실 운영비 지원, 노숙인 보호,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의 2억 3천만원 규모의 예산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수혜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 후퇴를 가져올 것이기에 심히 우려되며 사회보장사업은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최우선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 사회적 논의 과정이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유사·중복성의 정의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복지 사무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 증진 사무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을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가며 어려운 주민을 한 명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처럼 지역에서 일군 맞춤형 복지의 싹을 밟아 버리는 중앙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은 지역 복지를 축소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기에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1.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